

# 확 넓어진 운동장... 전남광주특별시장 득표 전략도 '투트랙'

## 사상 첫 민선 통합단체장 선출... 선거구 넓어 후보마다 '고심' '민심 훑기' 백병전에 '이슈 선점' 공중전까지 전례 없이 치열

6·3지방선거를 두 달 남짓 앞둔 320만 명 전남·광주의 사상 첫 민선 통합특별시장 자리를 둘러싼 표심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짧은 기간 전례 없이 드넓어진 표밭을 일궈야 하는 만큼 바다 민심 다지기 '백병전'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를 활용한 '공중전'까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치열해지고 있다.

25일 지방선거에 따르면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분리할 때까지 전남과 광주의 광역단체장은 관선 전남도지사 1명뿐이었다.

시·도 분리 이후 1995년부터 시·도가 따로 민선 단체장을 뽑았지만, 전남과 광주가 재통합하면서 이번 6·3지방선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민이 통합단체장을 직접 뽑는 선거가 됐다.

이번 선거가 320만 명 전남·광주의 행정 수장 1명을 뽑는 '통합 타이틀 매치'로 치러지면서 당초 시·도지사에 출마표를 내리던 주자 중 일부는 이미 출마를 단념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과 각 야당 내부 교섭령리를 거쳐 주자가 7~8명으로 좁혀졌다. 링 위에 오른 후보들도 기존 선거구

보다 2배가량 불어난 유권자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고심이 깊다.

통합 전 광주의 인구·면적은 140만여 명, 약 500㎢. 전남은 180만여 명, 약 1만 2363㎢.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입장에서는 흠이 아 할 선거구 면적이 산술적으로 25배 늘어났고, 도지사 출마자 입장에서는 도내 유권자 수에 버금가는 광역도시 생활인구 140만 명의 표심을 새롭게 얻어야 한다.

광주와 전남 서부권·동부권 3개 권역, 27개 시·군·구를 훑어야 하는 후보들은 매일 현장 일정을 촘촘하게 짜고 있다.

각 지역 주요 전통시장 방문은 기본이고, 후보마다 권역·시군 단위 각종 직능단체, 주요 종교계 인사, 당원 간담회 등을 돌고 있다.

지방선거 특유의 바다 민심 다지기, 저인망식 공략에 힘쓰고 있지만 이동 시간과 조차·자금력 등에서 한계도 뚜렷하다.

때문에 각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연고나 지지세가 취약한 지역부터 공략하는 형국이다. 또 선거구 확대에 맞춰 TV토론과 뉴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 각종 매체를 통한 '공중전'에도 집중하고 있다.

8년간 도정을 이끈 재선 도지사 김영록

후보는 연일 광주 표심에 구애하고 있다. 대학 진학 전까지 광주 소재 초·중·고를 졸업한 이력을 부각하고 선거사무소도 광주 도심에 차렸다. 김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이병훈 후보를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유일한 재선 광주 시장인 박광대 전 시장의 지지 선언을 홍보하며 광주 표심을 연일 두드리고 있다.

광주시장인 강기정 후보는 지난주 전남동·서부권에서 각기 권역별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아침 일찍 영광·영암 등지를 찾아 표밭갈이에 나섰다. 순천에 후원사무소를 차리는 등 60만 동부권 민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남 국립현대미술관 순천점 유산 등 이슈를 던졌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후원회장을 맡았다며 중량급 후보임을 어필하기도 했다.

나주·화순 3선 국회의원 신정훈 후보 역시 광주를 중심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을 묶어 적층·분야별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행보를 펼치는 중이다. 김영록 후보의 8년 도정 책임론과 민형배 후보의 '카드뉴스 여론조사' 등 경쟁 후보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강 후보와 신 후보는 23일 종교계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후보들.

예방 등 현장 일정을 함께 소화하는 등 서로 다른 지역적 지지 기반을 보완하는 '시너지' 단일화까지 모색하고 있다.

전남 동부권에 기반을 둔 주철현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본회의 일정에 참여하면서 '고공전'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SNS 슷폼 콘텐츠 등으로 통합특별시장 6대 미래 전략을 지역민에게 알리고 TV토론이나 라디오 단독 대담 방송에 출연해 동부권 목소리를 대변했다.

광주의 재선 의원인 민형배 후보는 연일 지역·분야별 정책과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당내 호남 중진 박지원 의원이 후원회장을, 각계 중량급 인사가 정책자문을 맡는다며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23일 하루에는 무안·함평·영광·장성·담양 등 5개 시군을 훑는 가 하면, TV토론 당일에는 현장 일정 없이 비방·검증 공세에 대비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모바일 단체대화방 등지에서 각 후보 캠프나 지지자들이 선거 관련 후보 간 공방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글 등을 주고받거나 퍼나르며 물밑 선거 전쟁이 치열하다.

야당들도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판 자체가 커지면서 민심 공략에 애를 먹고 있다. 진보당은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을 단일 후보로, 정의당은 강은미 전 의원이 출마를 권하며 진용은 꾸렸지만 선거 기간 중 유세 전략을 두고 고민이 깊다.

반면 제1·2야당인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행정통합 추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후보를 내지 확실하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연초부터 급물살을 탄 행정통합이 입법화된 지 석 달도 안 돼 사상 첫 통합특별시장 선거를 치르게 됐다. 섀펜이나 전략이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 표심 예측도 쉽지 않아 모든 후보

가 고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는 인지도부터 올려야 하는데 대면 유세 등 기존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물리적 한계가 뚜렷하다"며 "각 후보가 자신을 중심으로 이슈와 쟁점을 이끌어가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총동원하는 '메시지 정치'로 권역별 표심을 얻으려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두 광역 선거구가 합쳐지면서 기본적으로 인지도 싸움이 됐다. 대면 유세보다는 공중과 TV토론과 각종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공중전'이 인지도 향상에 효율적이다. 각자 지지 기반을 다진 후보들이 단일화한다면 표나 조직 이탈을 막기 위한 '다지기 전략'으로서 '백병전' 선거운동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 광주·전남 '깜깜이 선거'... 통합시장부터 지방의원까지 혼란

### 행정통합 후 첫 선거 불구 선거구도 정수도 미정 '답답할 노릇'

### 與 경선 '출처 불명 지라시' 공방에 정책배심원제 방침도 감감

광주·전남 6월 지방선거가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 국면으로 빠져들면서 현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40년 만의 행정통합 후 처음 치러지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전략 수립과 후보 인선에 애를 먹고 있고, 초대 특별시장 여당 경선 과정에서는 경선 득표를 미공개로 출처 불명의 지라시가 나돌고 논란 끝에 도입한 정책배심원제는 세부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자연스레 나오고 있다.

◆ "가보지 않은 길인데 나침반도 없다"...민주당 경선 혼선

가장 큰 혼선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통합특별시장이라는 거대 지방권력을 뽑는 중차대한 경선에 내부 논란을 단고 '투표권 없는 정책배심원제'를 도입하고도 구체적인 방침이 없어 후보들이 애를 먹고 있다.

한 경선후보 측은 24일 "권역별 정책배심원제 토론이 코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중앙당에서 명확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토론회 대응과 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적잖다"고 하소연했다.

1차 예비경선을 앞두고는 상당수 후보들이 "시민들이 각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다"며 "번개에 콩 볶아 먹듯 진행되는 졸속 경선"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후보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깜깜이"라며 경선 불참과 중도 사퇴를 선언했다.

◆ '경선 결과 비공개도 집안 싸움과 감감이 판 키워'

민주당의 폐쇄적인 경선 관리 체계도 '깜깜이 선거'의 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예비경선 득표율과 후보별 순위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오고 있으나, 이 틈을 타 1차 예비경선에서 후보 6명의 개별 득표율과 순위가 적힌 '출

처불명의 지라시'가 유포되면서 후보 간 공방이 극에 달했다. 여기에 '눈속임용 그래픽'까지 SNS를 통해 대거 유포되면서 유력 후보들 간의 고발전으로까지 격화되고 있다.

결국 초반 경선전은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에 기반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고, '경선 결과 비공개'라는 당규는 무력화됐다.

민주당은 특정 후보에게 쏠리는 '밴드 웨건 효과'를 막기 위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턱없이 낮은 득표율 탓에 공개를 꺼려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비공개 방침이 되레 출마자들의 전략 수립에 장애 요인이 되고, 허위 정보를 양성화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드림보 정가특위에 "내 선거구가 어딘지도 몰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의 상황은 더

욱 심각하다. 통합특별시장 출범에 따라 광주시의원 정수를 인구비례에 맞춰 현재 23명보다 10명 가량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 논의는 하체일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후보들은 자신이 뭘 운동장이 어디인지, 경쟁자가 몇 명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불완전 경선'을 치러야 할 처지다. 인구 변동이 큰 지역에서는 법 개정이 늦어져 조례조차 못 바꾸고 있다.

소수 진보 야당들은 거대 양당의 독점, 광주·전남만 놓고 보면 민주당 일극체제가 낯을 불합리한 현상으로 보고, 신속하고 전향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광주시장 관계자는 "진즉 확정됐어야 할 선거구가 아직까지 논의 단계에 있어 어느 후보를 어느 선거구에 출마시키지 결정할 수 없다"며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증원으로 광주

광역의원을 5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광주를 찾은 정의당 권영국 대표도 "광주 광역의원 정수를 몇 석 늘리고, 어떤 방식으로 배치할 지 아직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안타깝다"며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의석수 증원이 불가피하고 특히 비례대표는 30%로 확대하는 게 다양성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정가 관계자는 "깜깜이 선거는 무투표 당선, 자기 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쪼개는 게리맨더링과 함께 유권자 소외와 선거 무관심을 낳는 요인"이라며 "권역별 토론회를 늘려 이를 의무화하고 경선 정보는 일정 수준 투명하게 공개하고 선거구 확정도 4월 중순 전에는 꼭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특별시 출범 앞두고 전남도 통합 준비 '속도'

전남도가 7월1일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조직·재정·인사·법제·전산 등 핵심 분야 전반에 걸친 통합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행정통합추진단을 실무준비단으로 전환했다. 1국2과5팀 체제로 확대된 준비단은 실무 통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분야별 과제를 총괄하고 있다.

전남도는 과거 타 지역 기초자치단체 통합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논의해 18개 핵심과제를 담은 행정통합 실무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료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통합의 핵심과제는 조직·재정·인사·법제·전산시스템 등이다.

조직·재정 분야에서는 전남광주의 현황을 비교 분석, 차이를 조정하고 통합안을 수립한다.

인사 분야는 행정부지사(부시장)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 인력관리계획을 마련한다.

전남광주 자치법규 2600여건을 전수조사해 통합 즉시 시행, 한시 유지, 일원화 대상 등으로 구분하고 단일 법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특히 통합 즉시 시행할 법규는 사전 협의를 거쳐 7월1일 출범과 동시에 시의회 의결과 공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현 기자

청산도에서 치유해 봄

# 청산도 슬로걸기 축제

2026. 4. 1. ~ 4. 30.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 2026 Pre 완도국제 해조류 박람회

기후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미래

2026. 5. 2. SAT - 5. 7. THU

완도군 해변공원 및 해양치유센터 일원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산도슬로걸기축제추진위원회

2026 Pre Wando International Seaweed Exhibition